

# 지방의회 의정비 내리기 '시늉만'

광주·전남 월정수당 줄였지만 정부 기준액 보다 높아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을 올려보니 줄였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기준액)보다는 여전히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생색내기 성 의정비 책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광주지역의 경우 올해보다 7.4% 인상됐고 전남지역에서는 5.

7%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에 비해서는 광주지역은 8.7% 낮은 반면 전남지역은 오히려 4.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시의원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4.7%(4천855만 원) 인상했고, 기초의원의 경우 동구 11.9%(3천108만 원), 서구 6.6%(3천 58만 원), 남구 0.3%(2천919만 원), 북구 6.5%(3천116만 원), 광산구 12.1%(3천296만 원) 인상했다.

하지만 이를 차지단체의 의정비는 행안부 기준액과 비교할 경우 시의회는 5.0%, 동구 4.8%, 서구 12.4%, 남

구 12.1%, 북구 9.2%, 광산구 5.0% 낮은 수치다.

광주지역 차지단체의 경우 올해보다 인상됐지만 행안부의 기준액,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 수준에 비해 낮았던 탓에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지역은 내년도 의정비가 산감됐음에도 불구, 올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워낙 큰 폭으로 의정비를 인상한데다 정부가 각 차지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제시한 기준액보다 높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인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를 올해와 같은 4천748만 원으로 동결했으나 이는 행안부 기준액(4천442만 원)보다 306만 원(6.9%) 많은 것이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결을 결정, 행안부가 기준액을 제시하면서 기준액의 ±20% 범위에 들 경우 심의위 구성 없이 동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외 22개 시·군의회도 행안부 기준액보다 평균 3.9% 높은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시의회가 행안부 기준액보다 11.1%(3천672만 원) 높은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해 가장 높은 인상을 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여야는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

회를 열어 예산안과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광

점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임시국회 역시 ‘생산국회’가 될지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했지만 끝은 심사기간으로 부실·졸속 심사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고

령자 주거안정법, 불법채권집행행위 방지법 등 민생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정쟁에

밀려 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국가재정법 등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된 공청회나 청문회 한 번 개최되지 않아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기보다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풍靡이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 등 이념 법안을 놓고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력한 시각차를 드러내 1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기력 애당’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애당’으로서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과반 넘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겨우 겨우 만한 ‘강한 애당’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기보다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풍貌이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홍준표(앞줄 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오른쪽)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서로 만나 민주노동당의 강력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새해 예산안 관련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막판 예산안 심사에 진통도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

계수조정위 증액-감액 공방…민주 ‘小小委’ 운영 반대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불꽃 뛰는 ‘증액·감액’ 공방이 벌어지는 등 여야는 9일에도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소위는 지난 8일까지 감액심사를 벌여 1조1천억~1조2천억원대 삭감에 잠정합의했지만 그 이상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과 민주당 층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조 원의 ‘문제 예산’을 삼각하고 8조3천 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특정지역(포항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간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큰 지역편 사업 ▲지난해 대비 과

도하게 증액된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사업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흡한 사업 등의 ‘감액심사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반면 총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 8조3천 억원(순수 증가분 4조3천억원 포함)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에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할 정도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예산안을 조기 처리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내에 감액 및 증액을 담당할 2개의 ‘소소위’(小小委)를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오는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전에 있는 징집예산을 달리는 2개의 소소위를 구성, 속도를 낸다는데 8일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민주당이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막판 예산안 심사에 진통도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18대 첫 정기국회 ‘낙제점’ 폐회

정쟁으로 경제·민생법안 뒷전…감세법안 처리 무산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로 10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정기국회는 민의를 모아 재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구태의 그늘에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했지만 끝은 심사기간으로 부실·졸속 심사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고령자 주거안정법, 불법채권집행행위 방지법 등 민생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정쟁에

밀려 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국가재정법 등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된 공청회나 청문회 한 번 개최되지 않아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기보다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풍貌이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역민 10명 중 8명 “MB정부, 호남 훌대”

### 한국사회여론조사원 조사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8명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1%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민주당이 제 1 야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에 그쳤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3%에 달해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광주만 놓고 볼 때는 금정 대부분이 32%대 6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민주당의 지지를 정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력한 정체성 확립 실패’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책 비전 능력의 부재’ 20.7%, ‘과거 열린우리당의 부정적 이미지’ 16.7%, ‘지도부의 지도력 문제’ 14.6%, ‘유망한 정치인 부재’ 8.6%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 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 첨삭지도 실시

## 국내영교육학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국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view.net

## 에듀뷰넷

▶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비전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교원임용고시 전문